

디지털_분야_관련법 #플랫폼_관련법 #데이터_관련법 #디지털화

2021 국내 디지털 분야 주요 입법 이슈

국가의 법령은 사업 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큰 관심을 받았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의 시행 결과 타다의 주요 서비스가 운영이 중단된 사례를 대표적인 최근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자주 함께 언급되었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도, 혹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규제의 미비도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은 국가에 새로운 법의 도입이나 기존 규제의 완화 등과 같은 법률 정비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지난 한 해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목소리가 가장 큰 시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비대면이나 뉴노멀 등으로 일궈진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관련 정책 및 입법 과제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1월 26일, 법제처는 총 28개의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210건의 법률안을 담은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으며, 다음날인 27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의 국가적 현안 20가지를 담은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선거법부터 가정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본고는 디지털 산업 이해관계자를 위해 디지털 분야와 관련된 법안 일부만을 정리하고자 한다.

■ 플랫폼 ... 산업 발전 저해가 아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가능할까

온라인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이다. 거대 테크 기업으로 언급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삼성 등은 모두들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한 후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로 인해 국내외에서 몇몇 독점이나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각국에서 이에 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입법 예고를 마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안이 지난 1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다. 해당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남에 따라 부처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과거 2007년에도 IPTV 도입을 두고서 부처 및 위원회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법률 도입이 지연되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도 여러 가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국가의 법령이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률 정비에 대한 요구가 다수 나타남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 법안은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공정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골자이나, 향후 그 영역이 크게 확장될 수 있음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는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배달앱과 앱스토어, 검색엔진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한 여러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나 최근 SK텔레콤의 앱스토어인 '원스토어'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사업 협력을 넘어 지분 투자까지 단행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신3사에 더불어 기존 협력사였던 네이버까지 함께하는 형국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원스토어와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가 최근 성장세를 보이면서 토종 앱마켓이 글로벌 앱마켓의 독점을 일부나마 견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규제안이 담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들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에 글로벌 앱마켓이 당분간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물론 국내의 경우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이러한 법안에 대해 통상 문제 등의 우려를 표하고, 구글이 수수료의 인상을 연기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바가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Spotify와 Epicgames 등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현지시간으로 3일)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듯, 지난해 망 사용료와 관련하여 해외와 국내 CP들의 차별이 주요 논의로 떠오르고, 그 결과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명 **넷플릭스법**이 통과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도 다양한 법적 논의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초 구글과 웨이브가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해당 시행령이 적용된 바가 있으나, 입법의 시발점이 되었던 콘텐츠 사업자의 망 사용료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의 파급력이 올해 다시 커질 가능성도 다수 존재한다.

■ 데이터 ...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사이

앞서 다룬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데이터로, 현재 모든 디지털 산업 발전과 가치 창출의 자원이자 촉매로서 데이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나 디지털 환경에서 다뤄지는 데이터 중 다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유럽의 GDPR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바가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데이터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불러온 바가 있다. 올해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안 개정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올해 1월에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13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 해당 개정안은 데이터 산업 발전에 필요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존의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전송 요구 가능 대상이 본인의 신용정보 수준에 한정되어있어 일부 금융권에서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나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 3자에 대한 데이터 전송이 보다 용이해지는 만큼, 마케팅의 측면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여정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의 퍼포먼스 마케팅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토종 앱스토어의 약진과 해외 입법 사례로 인해, 지난해 무역 분쟁 등에 대한 우려로 무산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해 큰 주목을 받았던 넷플릭스 법은 최근 구글과 웨이브에게 적용된 바 있으나,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음

지난해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시작을 알린 데이터 산업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들이 올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개인신용정보로 한정된 데이터 사업의 영역이 개인정보 전반으로 확장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안이 통과되는 경우 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민간 데이터의 개방을 장려하는 '공익데이터'와 개인과 사업자의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유권 및 침해행위 금지 등이 논의됨

디지털화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이 큰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법령은 이커머스 및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와 관련된 논의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적 변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이 외에도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중심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민간의 영역을 더한 '공익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와 동시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이나 「[데이터 기본법안](#)」에서 논의되는 데이터 자산 침해행위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 탄력받는 일상의 디지털화(化) ...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 발생하나

이러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는 정부가 내세운 K-뉴딜(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와 같은 국가혁신 과제를 실천하는 전략인 K-뉴딜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을 '안정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구조인데, 이중 디지털 뉴딜이 데이터 담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 비대면 산업 육성 등과 같은 디지털화(化)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산업의 관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결제시스템 도입을 돕는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촉발된 일상과 사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이나 무인판매기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소상공인 등이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에서 배제될 위험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수불가결했던 가운데,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디지털 분야에 또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추정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의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경쟁 상대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어 온라인 광고·마케팅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공연·전시 등의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과 원격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같이 디지털 적용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한동안 디지털 업계는 법령 개정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겨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법적 변동성은 국민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과 사업 운영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 보고서가 디지털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적 논의를 정리함에 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